

1991년 4월 1일 제120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1년 4월 1일(월) 오전 10시 1분 개회

○ 발언자:

-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 헌법민주연합 소속, 1998년 민주당 참의원 의원 회장, 2001년 참의원 부의장, 민주당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안자, 무라야마 정권의 아시아여성기금 반대 활동)
-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 정부위원(노동성 직업안정국장)
- 이노우에 유키히코(井上幸彦) 정부위원(경찰관료, 경시청 경비부장, 경찰청 장관관방장, 경찰청 경무국장, 경찰청 차관, 경시총감)
-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국무대신(중의원 의원, 자유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문부대신, 자유민주당 총재, 내각 총리대신 및 대장대신, 신진당 당수)
-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정부위원(외교관, 외무성 아시아국장,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장, 주 인도 대사, 주 중국 대사)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015261X01319910401&spkNum=259¤t=20>

○ 해제(개요 및 특징)

1990년 6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조선인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동원 문제에 대해, 이후 정부의 조사 결과에 관한 질의응답. 1990~1991년 일본정부의 자료조사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여전히 반복되는 책임회피 식의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 내 여성단체의 요구사항,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오키나와의 송환 조선인 명부 속에 위안부로 보이는 조선인 여성 50여 명의 명단 등에 관해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번역

- ▷ **모토오카** “(전략) 그림 다음으로 작년 6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질문했던 강제연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조사를 약속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성에서는 노동 본성(本省), 도·도·부·현(都·道·府·県), 공공직업안정소 등의 관련 부서, 창고,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최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습니다. 또한 모든 시·구·정·촌(市·区·町·村)에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사정에

밝은 직업안정소의 행정 관계자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또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약 800곳을 조회했습니다. 그밖에 그때그때 파악된 정보에 대해서도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8월 7일까지 약 8만 명의 명부(名簿)를 확인하여 그 목록을 한국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명부 목록을 한국정부에 제출한 뒤 각지에서 새로운 명부가 존재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서 관련 부서가 연계하여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8월 7일을 기준으로 미처 정리되지 않은 것과 그 후 확인된 것을 포함하여 새로이 약 1만 명의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시점까지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과 관련하여 약 9만 명의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유자의 양해를 얻은 명부의 사본을 올해 3월 5일 외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모토오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강제연행의 실태뿐이죠?”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작년 6월에 질문하신 내용은 해군작업애국단, 남방과견보국단의 실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 국회도서관의 색인을 검색하는 등의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중군위안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당시 후생성(厚生省) 근로국에 근무하던 분들과 국민근로동원서에 근무하던 분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했습니다만, 당시 후생성 근로국, 국민근로동원서는 모두 조선인 **중군위안부**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성에서는 해군작업애국단, 남방과견보국단을 포함하여 조선인 **중군위안부**에 대해 조사를 펼칠 요량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그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실마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모토오카** “『특고월보』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 **이노우에 정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고월보』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경찰청에서 다방면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는 『특고월보』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일절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후(戰後) 내무성(內務省)이 해체되고 경찰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었을 때, 내무성으로부터 새로 창설된 경찰 쪽으로 자료인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해보았는데, 『특고월보』의 복제판(複製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기술에 대해, 저희 쪽에서는 어떤 자료에 기초하여 그러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략)

- ▷ **모토오카** “그렇다면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9개 단체의 대표가 방문하여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이후 총리 앞으로 공개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서한을 보셨습니까?”
- ▷ **가이후 국무대신** “보았습니다.”
- ▷ **모토오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 **가이후 국무대신** “여러 가지 문제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최대한 조사하여 그 실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 **모토오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 ▷ **가이후 국무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드릴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바, 아직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 **모토오카** “가이후 총리에 대한 요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섯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 ▷ **다니노 정부위원** “사실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섯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로 첫째는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을 **중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둘째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셋째는 만행, 야만적 행위의 전모를 직접 밝힐 것. 넷째는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울 것. 다섯째는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계속 환기해 주기 바란다는 여섯 개 항목의 요구입니다.”
- ▷ **모토오카** “이 여섯 항목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답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 **야노 정부위원** “본 서한의 핵심 사안인 **중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아까 노동성의 답변처럼 조사를 펼쳤으나 실마리가 될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만족할 만한 답변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밖에 역사교육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접수한 서한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우선은 서울의 대사관에서 현 상황에 대해 유관 단체에 설명하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 **모토오카** “저도 작년에 **중군위안부** 문제를 질문한 바 있어서 그 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키나와(沖縄) 송환 조선인 약 1,600명의 명부, 실제로는 1,584명의 명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의 미군 야

케나수용소(屋慶名收容所)에 수용되었던 조선인 명부의 사본입니다. 이것은 GHQ¹⁾로부터 일본에 반송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기록의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명부에 기록되어있는 1,584명의 이름을 하나씩 세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조선인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성이 51명, 그리고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47명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연행 명부라고 하는 자료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습지만,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포로수용소에 조선인이 수용되었으며, **중군위안부**가 있었다는 내용의 관계 서적도 몇 건 나와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명부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기록되어있는 여성들은 **중군위안부**, **여자정신대로** 징용된 사람들로서, 전쟁이 끝난 뒤 포로수용소에서 비군사원(非軍事員)으로 분류되어 이 명부에 등재되고 한국으로 송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립국회도서관의 GHQ 반환문서는 마이크로필름 30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키나와 송환 조선인 명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기선(汽船) 승선원(乘船員) 1,584명의 명부로서 이름만 연달아 게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보유기관이 국회도서관이므로, 노동성은 이 명부가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인지 조사 확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지적하신 자료가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립 국회도서관과 연계하여 조사해나가고자 합니다.”

▷ **모토오카** “한국 측에도 의뢰하여 이를 공동으로 조사하면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이번 징용자 등의 명부에 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협력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조사 정리하여 한국 측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력을 다해 조사할 생각입니다.”

▷ **모토오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천오백팔십몇 명인가요, 이 명부는 갖고 계십

1) GHQ(General Headquarters) :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1945년 10월 2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국 사령부. 일본어 명칭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聯合國軍最高司令官總司令部)’. 초기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통치했으나, 1946년 2월 26일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이 위원회가 일본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했다.

니까?”

-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도서관 측에 부탁하여 향후 확인 작업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 ▷ **모토오카** “그 자료는 제가 넘길 테니까 국회도서관에 의뢰하지 말고 일본정부의 손으로 이 문제를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의원님께서 자료를 넘겨주신다면 저희로서도 응당 조사를 벌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계성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소장기관에서 확인을 받고, 저희와 연계 협력하여 조사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고자 합니다.”
- ▷ **모토오카**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위안소**에 조선인을 데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여자정신대**라는 것은 존재했습니까?”
-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정신대와 관련해서는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이라는 것이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하여 1944년 8월부로 칙령 제519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 장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 장관은 이 청구 또는 신청받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촌장(市·町·村長), 단체장, 학교장에게 **여자정신대원** 선발을 명합니다. 지방 장관은 명령받은 시·정·촌장 등이 선발한 자 가운데 대원(隊員)을 정하고, 「정신근로령서(挺身勤勞令書)」를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령서를 받은 대원은 정신근로에 따라 총동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모토오카** “그 **여자정신대**에 조선인 **여자정신대**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저희는 그런 명칭을 들은 바 없습니다.”
- ▷ **모토오카** “현재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윤정옥(尹貞玉)²⁾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십니까.

1944년 12월, 이화여자전문학교 1학년 때 조선반도 각지에서 미혼의 젊은 여성을 잡히는 대로 **정신대**에 끌고 가는 비참한 일이 전개되었다. 이 일로 많은 학생이 결혼을 서두르고 퇴학하기 시작하자 당황한 학교 당국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공언했다.

2) 윤정옥(尹貞玉, 1925년생) : 영문학자, 인권운동가. 1943년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학교 측의 강요로 정신대 자원서를 쓴 직후 부친의 권유로 학교를 자퇴했다고 한다. 1980년부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일명 정대협)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는 국민총동원령에 따른다는 서식에 날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을 모면했지만, 그 무렵 나와 동년배인 많은 여성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이러한 문서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인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후생성 근로국이나 국민근로동원서라는 곳에서 동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당시 그곳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후생성 근로국, 국민근로동원서 모두 조선인 **중군위안부**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그 이상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 **모토오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자정신대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재차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반복되는 답변이라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근로국 혹은 국민근로동원서에서 동원업무를 행했고, 그곳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조선인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로서는 징용 명부의 실태 파악에 대해 지금까지 성의를 가지고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조사와 확인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 **모토오카** “납득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아까 제시한 명부 속에 있는 1,580여 명의 여성들은 오키나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저희로서도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징용자 명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최대한 조사를 벌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름만 쭉 나열되어있는 자료라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 **모토오카** “정부가 관여하고 군이 개입하여 **여자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조선 여성을 **중군위안부**로 삼아 강제로 남쪽으로 연행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가이후 총리, 당신은 총리로서 일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가면 좋으리라고 보십

니까?”

- ▷ **가이후 국무대신** “작년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직접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행위로 인해 건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끼친 점에 대해 솔직하게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의 응어리를 넘어선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러한 인식을 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은 이러한 수준에서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마도 외무장관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 측에서 명부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는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중략)

- ▷ **모토오카** “제 주변사람 중 한 명이 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는 인권상의 원칙을 침해한 매우 부당한 점이 있었다는 공식적인 사죄, 그리고 이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일한 간의 신뢰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가이후 국무대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로 인해 참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솔직하게 이 인식을 토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금을 달고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데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일한국인 3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의를 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으며, 또 명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모토오카** “이 **종군위안부** 문제는 그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한21세기위원회의 최종보고는 가이후 총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안에도 일한 역사를 둘러싼 인식 격차, 정말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역시 그중 하나로 강제연행 문제, 혹은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책임지고 제대로 규명해 나가지 않는 한, 아무리 가이후 총리께서 과거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뿌리부터 신뢰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가이후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커다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명에 노력하여 각 성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 **가이후 국무대신** “질문의 취지 등을 살펴서 저도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이므로, 그것을 넘어 미래지향

적인 관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도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제공할 것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